

역시나 '현역 불패'... 이번은 없었다

장관 인사청문회... 김부겸·김영춘·도중환 보고서 채택

김현미 논문 표절·전문성 부족 공세... 통과 무난할 듯

경경화 외교부 장관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정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들은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하거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역 불패'가 다시 입증될 전망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하루만에 15일 청문결과 보고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춘 후보자와 김부겸 후보자, 도중환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때 청문회 보이콧이 우려됐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국회 청문 절차를 마치게 됐다.

무엇보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의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27명의 현역 의원이 29차례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나머지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현역 불패'를 입증한 셈이다.

농해수위는 김영춘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 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입법·재정 및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조·조율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안행위는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감안 할 때 지방자치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호평

했다. 교문위도 도중환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위원 모두 보고서 채택에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진행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우선 논문표절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학원 시절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김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정책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전형적인 코드·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신은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코드·보은 인사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공세가 예상보다 상당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 채택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잘 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6·15 남북합의 법제화해야”

17주년 기념식 참석... “북, 핵 도발 중단시 조건 없이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정상선언을 거론한 뒤 “남북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됐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남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급한 ‘남북합의 법제화’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안보공약 중 하나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대두됐다. 이는 물론 우리의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서도 6·15 선언 실천 촉구 성명

YMCA서 기념식...윤장현 시장 “5월에서 통일로’ 길 열어야”

김대중평화센터(이희호 이사장)는 1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6·15의 계승과 발전-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이 선언의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김용학 연세대 총장의 축사,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의 특별강연,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900여명이 참석해 6·15 선언의 의미를 기렸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도 이날 광주YMCA 무전관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7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날 행사에는 김정길 광주전남본부 상임고문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각 정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시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상경여민’(相敬如賓)의 자세를 토대로 ‘5월에서 통일로’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6·15 공동위 전남본부도 이날 영암군 덕진면 영덕교 하천부지에서 통일살 모내기를 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6·15 남북공동선언인일과 10·4 남북정상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 핫라인은 나... 정부, 적극 지원할 것”

장하성 靑정책실장 광주 방문... “추경에 포함... 후속대책 착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민선 6기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자신이 중앙정부의 ‘핫라인’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장 정책실장은 또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해 시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정책실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뒤 ‘광주형 일자리’ 정부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지역일자리 창출모델로 전국적인 시선

을 끌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서 성과를 낸다면 중앙만 바라보던 일반통행식 운영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노사 화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지역에서 대통합을 이룬다면 광주형 일자리를 실행하기 위한 중앙의 지원은 어렵지 않고 그 가능성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중앙정부 핫라인은 저”라며 “다른 지역의 SOC 속 일자리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장하성 靑정책실장

이러 “추경안에 광주형 일자리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용역이 끝난 후 사물함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후속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나타냈다.

그는 또 “각 지역마다 지역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른 지역도 광주형 일자리처럼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만드는 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 정책실장은 이와함께 새정부 추경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는 “새정부 추경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니며 이번에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지속해서 유지되는 일자리들”이라며 “추경 집행이 되면 빠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은 소방공무원, 경찰관, 보육교사 등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면서 “특히 3조5000억원을 지방 몫으로 떼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소득불균형과 양극화의 구조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경의 시급성과 추경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자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 1인 2,000만원 이상
-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